



공적연금 개혁에 따른 사적연금의 보완적 활용

정 원 석(보험연구원 연구위원)

2023.2.27.



목 차

I. 연금개혁

II. 해외사례

1. 스웨덴

2. 호주

III. 사적연금의 역할

IV. 사적연금 평가와 과제

V. 결론 및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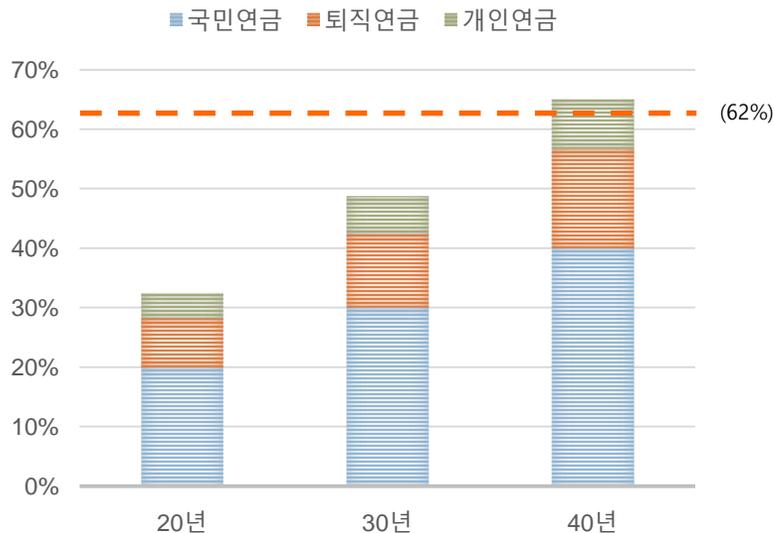
I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

- 우리나라는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구성된 3층 연금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국민연금 연소득의 9%를 40년 납입 시 은퇴 이후 40% 소득대체율 조달
 - 퇴직연금 연소득의 8.3%(연간 총 급여의 1/12)를 적립, 은퇴 후 기여한 만큼 수령
 - 개인연금 개인이 원하는 만큼 적립, 은퇴 후 기여한 만큼 수령

연금 가입기간에 따른 기대 소득대체율



주: 1. 65세 은퇴 이후 20년간 연금 수령 가정
2. 점선은 OECD 평균

우리나라 노인 빈곤의 심도(빈곤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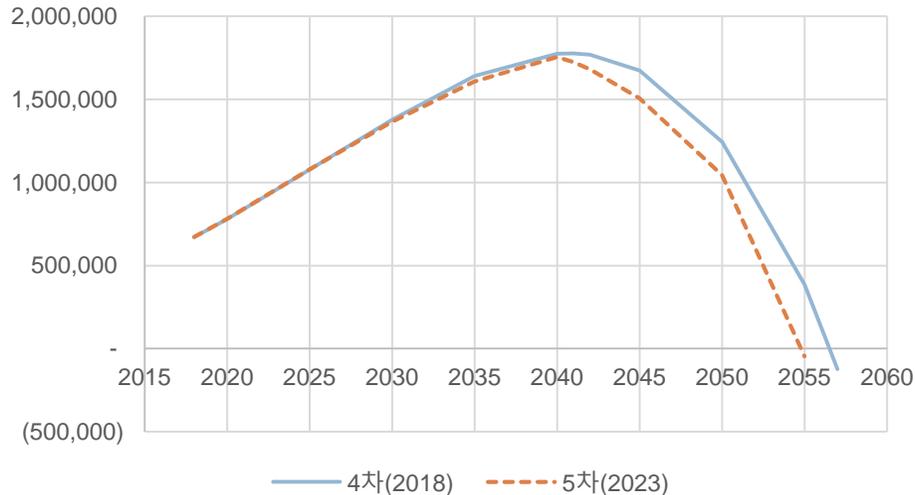


주: 1. 빈곤자의 평균 소득이 빈곤선에서 부족한 정도를 의미
2. 점선은 OECD 평균
자료: OECD(2020)

국민연금 개혁(1) - 개혁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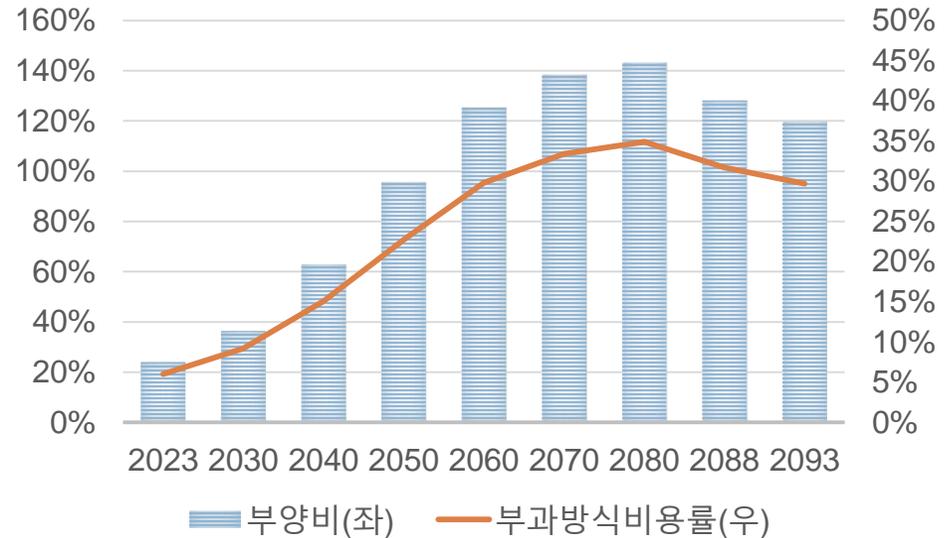
-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연금개혁이 논의중에 있음
 -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의 고갈시점은 2055년으로 예상되었음
 - 4차 추계 시(2018) 고갈 시점까지 39년의 시간이 있었지만, 5차 추계결과(2023) 고갈까지 기간은 32년으로 줄어들음
 - 기금고갈 후 부과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부담은 최대 연소득의 35%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국민연금 기금 추이



자료: 제4차,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부양비 및 부과방식 전환 시 비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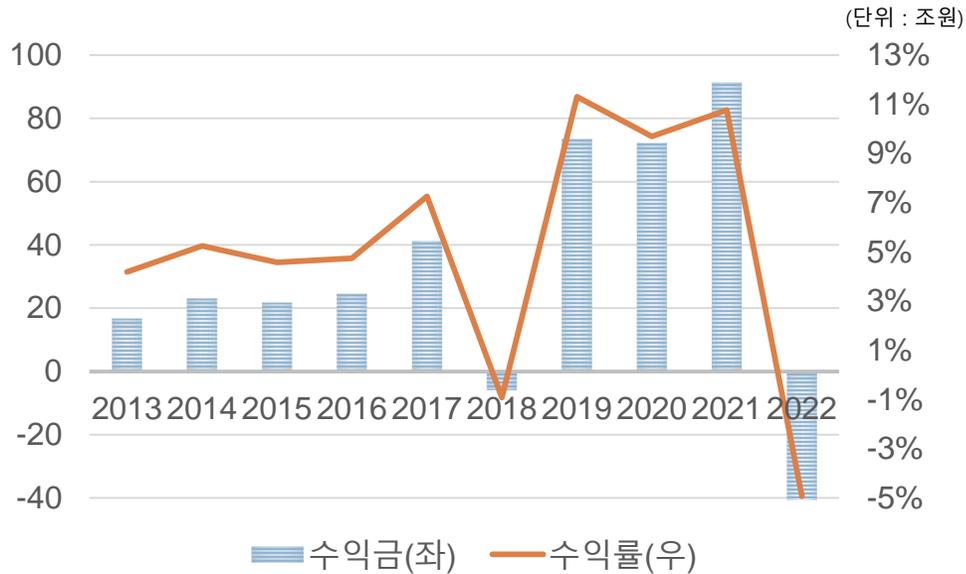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2022.1.27), 제5차 국민연금재정추계

국민연금 개혁(2) - 방향성

- 이번 연금개혁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지속가능성 제고가 될 것으로 예상됨
 - 부담율이 35%에 이르는 부과식으로 전환될 경우 제도의 존립이 위태로울 수 있음
 - 연금고갈의 근본적인 이유는 “내는 것 보다 더 많이 받는” 제도 때문임
 - 결국 공적연금 개혁은 지금보다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국민연금 수익률 수익금 추이



자료: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국민연금 수익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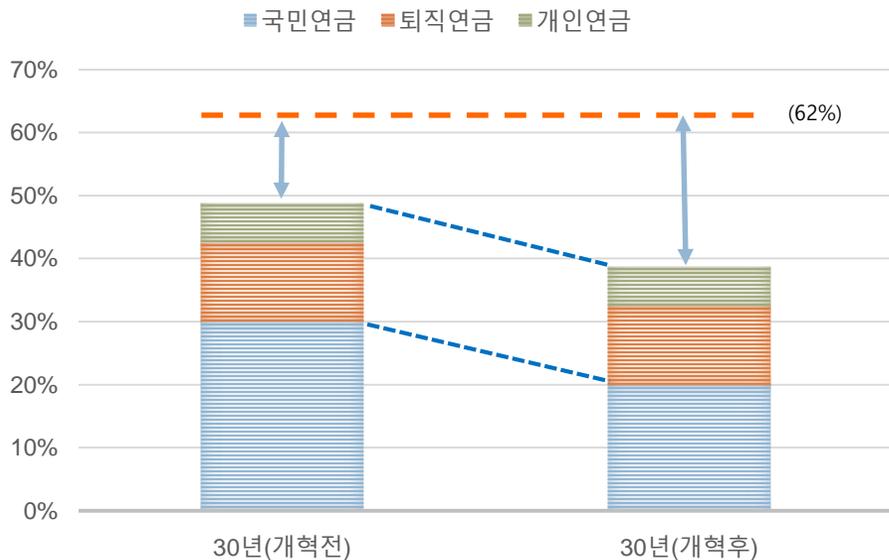
	확정적	확률적
계층 1	4.2	4.0
계층 2	3.2	3.0
계층 3	2.6	2.5
계층 4	2.1	2.0
계층 5	1.7	1.6

주 : 1. 확정적은 노령연금수급 이후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수령하는 경우를 감안한 경우
 2. 확률적은 노령연금과 기여기간 동안 장애 사망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를 감안한 경우
 자료: 최기홍, 한정림(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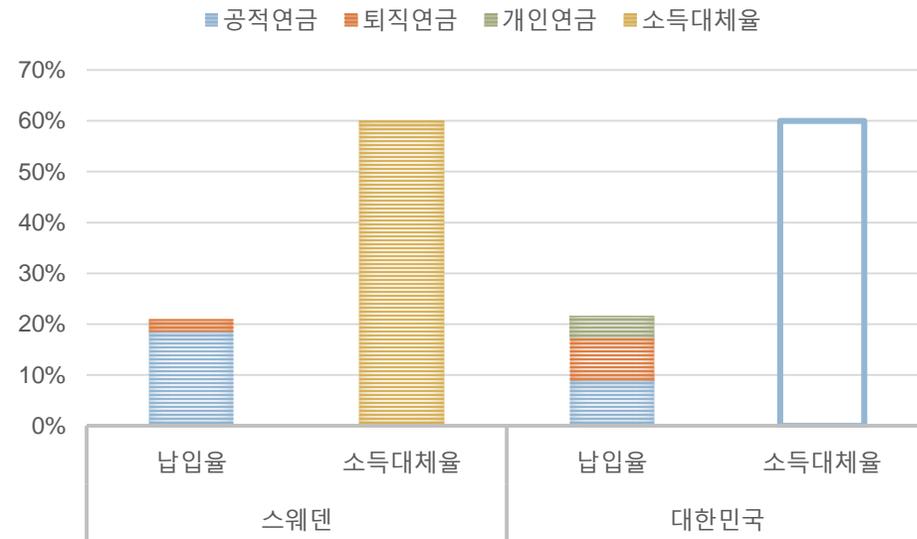
사적연금의 역할

- 공적연금이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개혁된다면 적절한 노후소득원 확보에 관한 논의 필요
 - 공적연금과 함께 사적연금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 해외에 사적연금을 활용한 노후소득원 확보 사례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
 - 스웨덴의 경우 40년 간 소득의 22% 수준을 납입하고 소득대체율 60%를 마련하는 제도로 설계됨

공적연금 개혁과 부족한 노후소득원 확보



연금선진국과 비슷한 납입율과 대체율을 추구



주: 1. 60세 은퇴 이후 20년간 연금 수령 가정
2. 점선은 OECD 평균



해외사례

1. 스웨덴사례

2. 호주사례

스웨덴의 연금제도

- 과거 스웨덴은 기초연금(AFP)과 소득비례연금(ATP)으로 구성된 연금체계를 운영하였음
 - 기초연금(ATP)과 소득이 가장 높은 15년을 기준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소득비례연금을 운영
 - 공적연금은 부과방식으로 운영되며 소득대체율은 60% 수준
 - 1990년대 들어 빠른 은퇴, 장수화, 경제성장 둔화 등으로 인해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 제기

스웨덴 경제상황의 변화

		1970년대 말		1990년대 말
고령자 근로비율	남	67%	⇒	49%
	여	34%	⇒	37%
60세 기대여명	남	17.3세	⇒	20.2세
	여	19.3세	⇒	24.2세
부양비		3.8	⇒	1.5(2030)
경제성장률		4.45%(1960s)	⇒	1.85%

스웨덴의 과거 연금 2030년 비용을 시나리오

	부양비(배)	소득대체율(%)	비용률(%)
시나리오 1	1.6	60	37.5
시나리오 2	2.25	60	27.0
시나리오 3	1.6	43	27.0

주: 부양비는 노인 1인을 부양해야 하는 경제활동인구를 의미 (경제활동 인구/연금수급자)
 자료: Klevmarken (2002), OECD 등

주: 부양비는 노인 1인을 부양해야 하는 경제활동인구를 의미 (경제활동 인구/연금수급자)
 자료: Sweden Social Insurance 2000 (2000)

스웨덴의 연금개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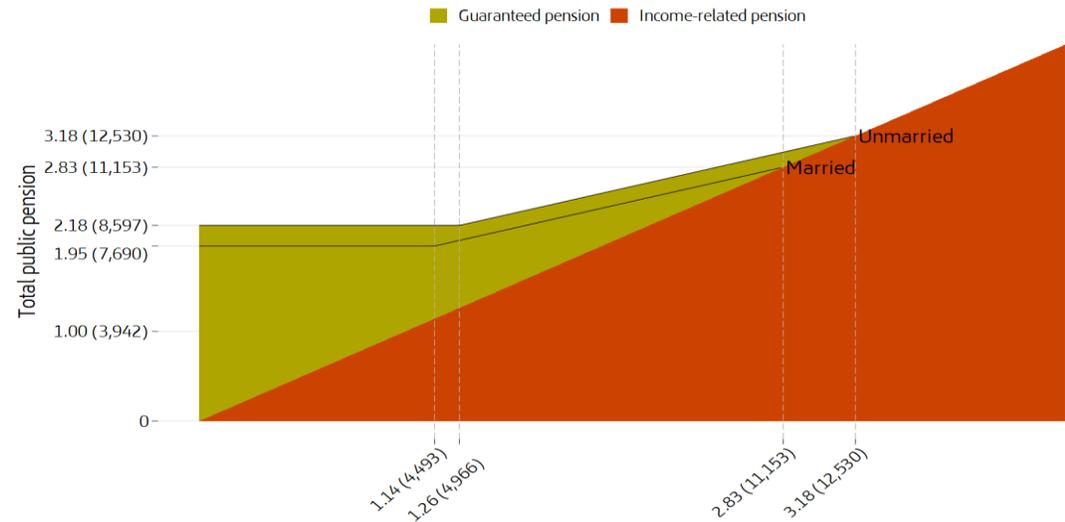
- 스웨덴은 연금의 지속가능성제고를 위해 **“기여한 만큼 연금을 받는”** 소득연금과 프리미엄연금을 도입함
 - 소득연금은 소득의 16%를 기여하고, 기여금과 경제성장률을 고려한 수익률과 기대여명을 고려해 연금액 결정
 - 프리미엄연금은 소득의 2.5%를 금융회사를 통해 자산 운용, 운용 수익률과 퇴직 시 기대여명 고려해 연금액 결정
- 공적연금 수급액이 충분하지 않은 노인(66세 이상)계층을 위한 **최저보장연금 (월 8,597 SEK)**을 도입함

스웨덴 공적연금의 변화

구제도		신제도
기초연금(보편적)	→	최저보장연금(보완적)
소득비례연금(DB)	→	소득연금(NDC)
	→	프리미엄연금(DC)

주: NDC란 공적연금 가입자가 기여한 금액을 가상의 계좌에 적립해 놓고 연금수령 시 적립된 금액 만큼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의미

스웨덴 연금지급 구조(최저보장연금 + 소득 + 프리미엄)



자료: Orange Report (2022)

스웨덴 연금개혁과 현재

- NDC로 운영되는 소득연금은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루어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
 - 매년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여 지속 가능성이 제고 되었음
- 개혁 이후 소득대체율 역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함
 - 65세 은퇴 시 56%, 67세 62%, 69세 69% 수준으로 OECD 평균 62%와 유사한 수준임

소득연금의 수입과 지출

(단위 : 십억 SEK)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완충펀드	1,230	1,321	1,412	1,383	1,596	1,696
기여금	7,457	7,737	7,984	8,244	8,616	8,893
총자산(A)	8,688	9,058	9,396	9,627	10,213	10,589
연금부채(B)	8,517	8,714	9,080	9,165	9,454	9,783
잉여/적자	171	344	315	463	758	806
자산/부채 (A/B)	1.0201	1.0395	1.0347	1.0505	1.0802	1.0824

자료: Orange Report(2022)

사적연금 수익률에 따른 기대 소득대체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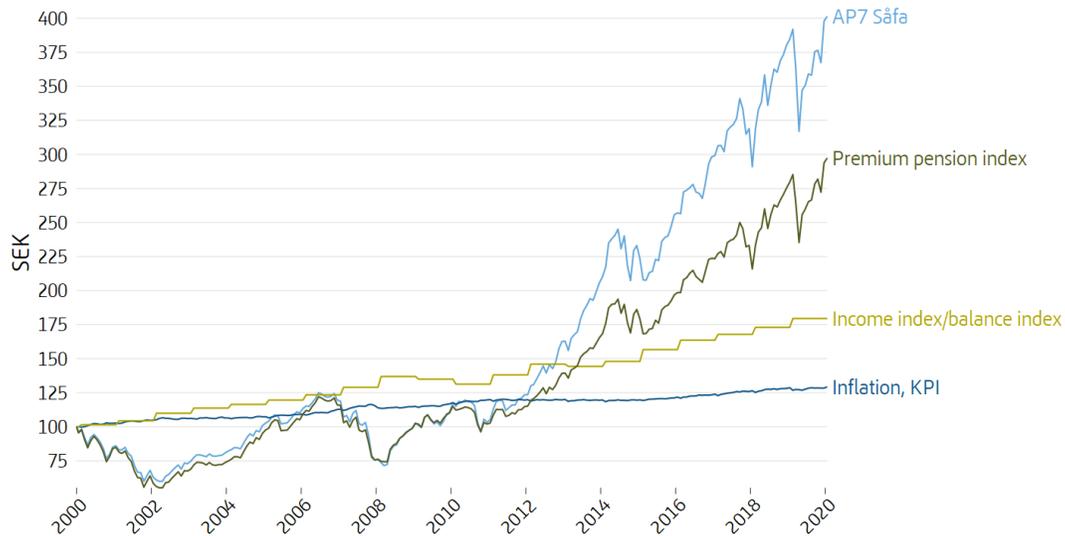
은퇴연령	소득연금	프리미엄(2.5%)+퇴직연금(2%)			전체(소득연금+프리미엄+퇴직)		
		수익률			수익률		
		2%	5%	8%	2%	5%	8%
64	0.37	0.1	0.2	0.43	0.48	0.58	0.8
65	0.39	0.11	0.22	0.47	0.51	0.61	0.86
66	0.42	0.12	0.23	0.52	0.53	0.65	0.93
67	0.44	0.12	0.25	0.57	0.57	0.69	1.01
68	0.47	0.13	0.27	0.63	0.6	0.74	1.09
69	0.5	0.14	0.29	0.69	0.64	0.79	1.19

자료: Palmer(2003)

스웨덴 사적연금의 활용

- 프리미엄연금은 변동성은 크지만 높은 수익률로 안정적이지만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은 소득연금을 보완
 - 프리미엄연금의 지난 20년간 연평균 수익률은 7.7%로 소득연금의 연평균 수익률 3.5%를 상회
- 프리미엄연금의 자산은 주로 주식형 펀드와 AP7 Safa (디폴트 옵션)을 통해 운용됨
 - 특히 스웨덴 정부가 운용하는 AP7 Safa의 수익률은 전체 프리미엄연금 펀드의 수익률 보다 높음

소득연금과 프리미엄연금의 수익률



자료: Orange Report(2022)

프리미엄연금의 자산 운용현황

(단위 : 개, 십억 SEK)

	2020년 등록펀드 수	운용자산 규모				
		2016	2017	2018	2019	2020
주식형펀드	346	388	441	407	517	582
혼합형펀드	37	69	70	66	69	65
지속가능펀드	28	147	166	167	209	221
채권형펀드	74	127	26	30	31	31
AP7 Sâfa	1	328	407	433	632	680
Total	486	959	1,110	1,103	1,458	1,579

자료: Orange Report(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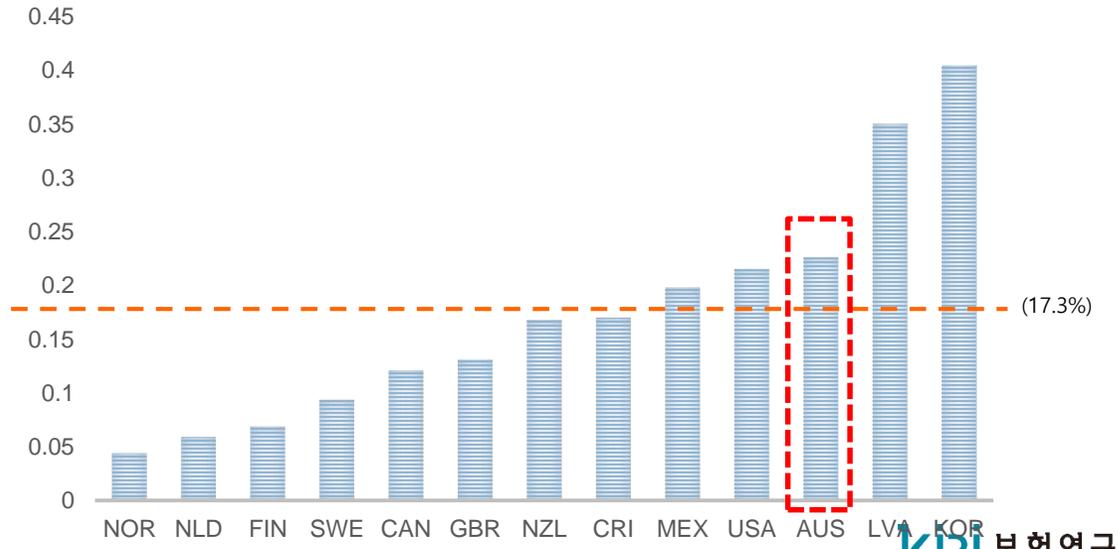
호주의 연금제도

- 호주의 노후소득보장제도는 노령연금과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으로 구성됨
 - 노령연금(Age Pension)은 일반재정으로 지급되며 월 최대 936.8 AUD 을 지급함
 - 퇴직연금은 DC형으로 운영되며 소득의 10.5%를 기여(향후 12%까지 증가)

호주의 노후소득 보장

	명칭	적용방식	재원	지급방식
1층	노령연금	거주자	정부재원	소득/자산 수준에 따라 차등지급
2층	퇴직연금 (Superannuation)	의무가입	사용자 기여금 (DC)	적립금만큼 수급
3층	개인연금	임의가입	개인 기여금	적립금만큼 수급

호주의 노인 빈곤율



주: 점선은 OECD 평균
자료: OECD Library

호주 슈퍼에뉴에이션의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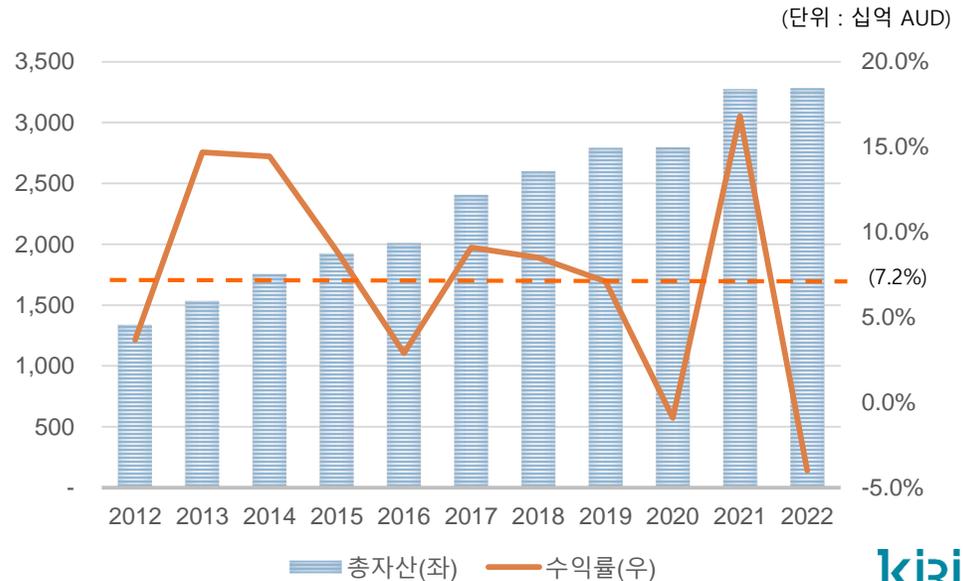
- 호주는 1992년 모든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슈퍼에뉴에이션(퇴직연금)을 도입함
 - 이전에는 대부분의 은퇴자들이 노령연금에만 의존하여 노인빈곤 및 노령연금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
 - 사적연금을 활용한 노후소득보장과 노령연금의 재정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퇴직연금 의무화를 도입
 - 현재 총자산 3,300억 AUD, 10년 평균 수익률 7.2%를 달성

호주의 노후소득 보장

기간	기여율	적용방식
1992.7 - 2002.6	3% - 3.5%	점진적 증가
2002.7 - 2013.6	9%	
2013.7 - 2014.6	9.25%	
2014.7 - 2021.6	9% - 9.5%	
2022.7 - 2026.6	10% - 12%	점진적 증가

자료: APRA

슈퍼에뉴에이션의 재무적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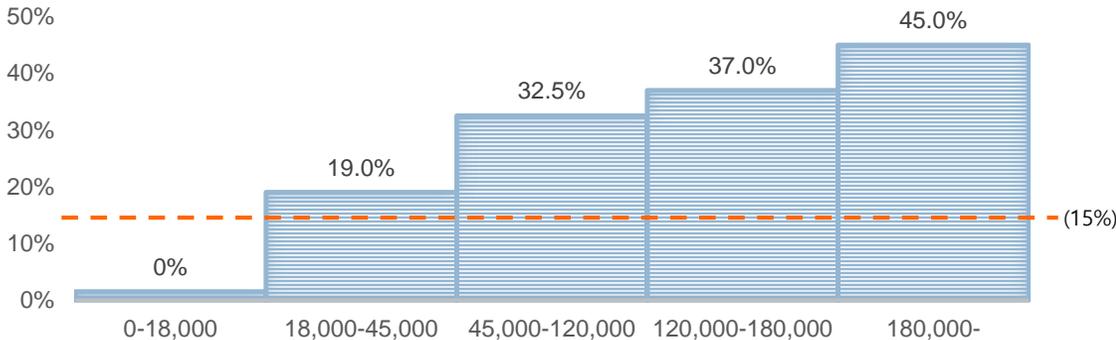
자료: APRA Annual Super Bulletin (2023)

수퍼 성공요인(1) - 정책적 지원

- 호주정부는 수퍼에뉴에이션 납입증가를 위한 **보조금지원 및 세제혜택 제공**
 - 저소득층의 경우 추가납입에 대해 보조금 및 세제혜택을 지원
 - 중산층의 경우에도 추가납입에 대해 저율(15%) 과세, 이는 최대 30% 세액공제와 동일한 효과
 - 연금수령 연령 이후 수령 시 비과세를 통한 세제지원 효과 극대화
- 슈퍼에뉴에이션 적립금의 **중도인출은 사망, 영구장애, 질병치료, 파산 등 매우 예외적인 상황으로만 한정**

호주 연금세제와 소득세율

단계	납입	운용	수급(60세 이상)
구분	과세(T)	과세(T)	비과세(E)



자료: 호주국세청, OECD

수퍼에뉴에이션 보조금과 세제혜택

(단위 : AUD)

소득	공동기여	세액공제	저율과세
- 39,837 미만	50%	과세소득 37,000 이하 15%	추가납입 시 27,500 까지 15% 저율과세
39,837 이상 - 45,837 미만	40%		
45,837 이상 - 48,837 미만	30%		
48,837 이상 - 51,837 미만	20%		
51,837 이상 - 54,837 미만	10%		
54,837 이상 -	없음		

자료: APRA

수퍼 성공요인(2) - 운용전략

- 분산투자 전략, 수수료, 공시체계 등의 조건을 만족하는 디폴트상품인 MySuper 상품을 도입함
- 가입자의 적극적 자산운용을 지원하기 위한 **알기 쉬운 정보제공**
 - 상품의 목표수익률, 실제수익률, 위험수준 및 수수료 등 핵심정보를 Heatmap 등 표준화된 방법으로 제공
 - 가입자의 합리적인 선택으로 인한 상품제공자 간의 **경쟁강화와 투자수익률 제고 유도**

호주의 퇴직연금 기금 유형별 투자수익률

(단위 : 십억 AUD, %)

기금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기업형	기금당 자산	2.2	2.8	3.1	3.9	4.1
	10년 평균수익률	4.5	5.8	8	7	7.5
산업형	자산	11.7	14.3	18	21.1	22.7
	10년 평균수익률	4.9	6.5	8.7	7.7	8.6
공적	자산	9.9	15.6	16.8	19.1	19.9
	10년 평균수익률	4.8	6.3	8.5	7.5	8.1
소매형	자산	4.7	5.3	6.2	6.7	6.8
	10년 평균수익률	3.1	4.9	6.9	5.8	6.8

자료: APRA, "Annual Bulletin June 2015 to June 2021"

Super Heatmap 예시

(단위 : AU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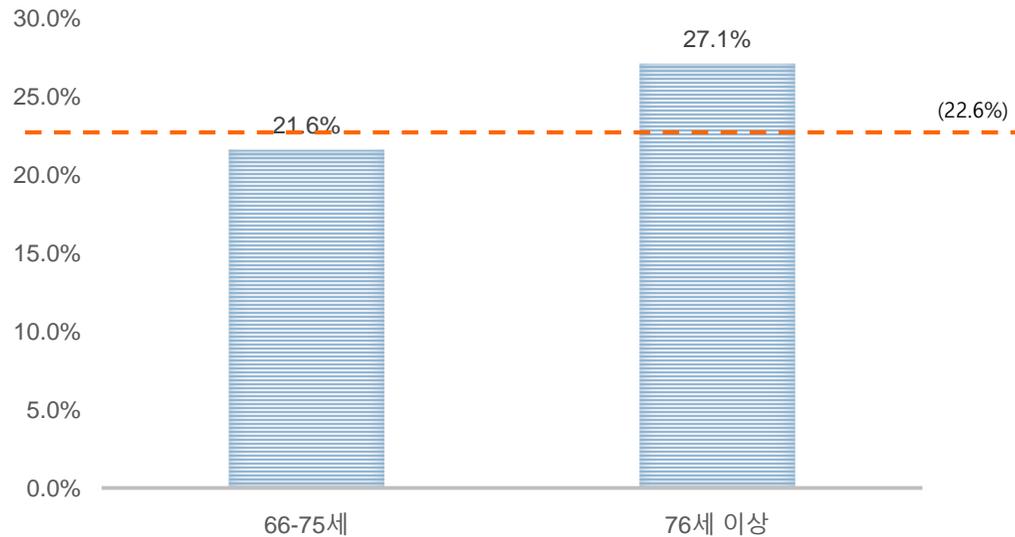
MySuper product name	MySuper Product Heatmap							
	Investment performance		Fees and costs				Sustainability of member outcomes	
	6 year Net Investment Return (NIR) p.a.	6 year NIR relative to Simple Reference Portfolio p.a.	Administration fees disclosed (\$10,000 account balance)	Administration fees disclosed (\$50,000 account balance)	Total fees disclosed (\$10,000 account balance)	Total fees disclosed (\$50,000 account balance)	RSE Adjusted Total Accounts Growth Rate (3 year average)	RSE Net Cash Flow Ratio (3 year average)
MySuper A							-3.00%	-8.00%
MySuper B	7.30%	1.00%	0.95%	0.35%	1.45%	0.85%	0.00%	4.00%
MySuper C	7.00%	-0.60%	1.30%	0.65%	2.00%	1.35%	-3.00%	1.50%
MySuper D	6.00%	-0.15%	0.50%	0.10%	1.40%	1.00%	1.00%	4.00%
MySuper E	7.90%	2.00%	1.10%	0.50%	1.50%	0.90%	5.00%	-15.00%
MySuper F	9.00%	0.10%	1.30%	0.80%	1.65%	1.15%	-2.00%	3.00%
MySuper G	7.80%	0.35%	1.10%	0.35%	1.90%	1.15%	8.00%	5.00%
MySuper H	8.20%	1.00%	0.90%	0.25%	1.70%	1.05%	10.00%	9.00%
MySuper I	7.70%	0.20%	1.00%	0.40%	1.70%	1.10%	9.00%	8.00%

자료: APRA MySuper Heatmap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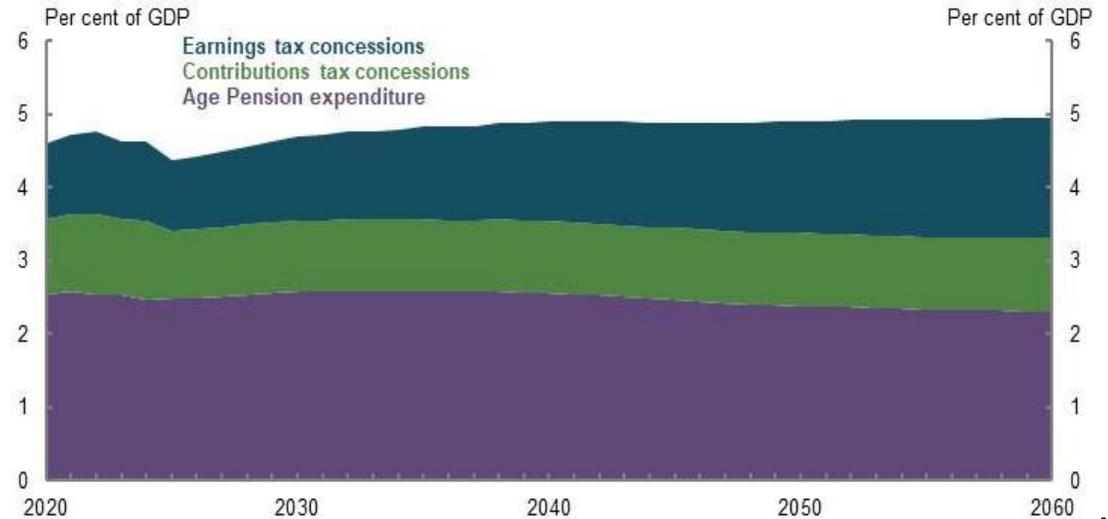
수퍼에뉴에이션의 성과와 한계

- 수퍼에뉴에이션 도입으로 **노후소득증가**와 **공적연금의 재정안정**을 이룬 것으로 평가됨
 - 수퍼에뉴에이션의 적용을 받은 66-75세 빈곤율은 21.6%, 76세 이상은 27.1%임
 - 수퍼에뉴에이션을 통한 노후소득 마련은 소득/자산에 따라 지급하는 **노령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킴
 - 다만, 연금화 수령을 강제하지 않는 것이 OECD평균 보다 높은 노인빈곤율의 원인으로 지목됨

호주 노인세대 연령 그룹별 빈곤율



호주정부의 노후소득 관련 재정지출 추계



주: 점선은 65세 이상 전체 평균 빈곤율
자료: OECD Library

자료: Department of Treasury (2020), Retirement Income Review Final Report

해외사례 소결

- **(스웨덴) 공적연금의 구조개혁과 사적연금의 활용**
 - 공적연금을 수익비가 1인 NDC 제도로 개혁하여 지속가능성 제고
 - 취약계층은 연금액에 따른 최저보증연금 제공을 통해 지원
 - NDC로 인한 낮은 수익률 문제는 강제사적 연금인 프리미엄연금을 통해 보완
- **(호주) 퇴직연금 강제화를 통한 노후소득 보장과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 제고**
 - 슈퍼에뉴에이션 가입 강제화, 추가납입 유인제공, 중도인출 제한 등 정책적 지원을 통해 적립금 증대
 - 가입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상품공급자 간 경쟁유도를 통한 수익률을 제고
 - 사적연금 활성화를 통한 노인빈곤 감소가 노령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제고



사적연금의 역할

필요 사적연금

- **적정수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필요 사적연금을 추정**
 - 최소한의 필요 사적연금 추정을 위해 개혁 이후에도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감소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현재 기초연금은 현재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
 - 가입기간별, 수익률 수준별 노후소득 보장 효과를 추정하여 필요 사적연금 수준을 추정

주요가정					
구분		가정 값		비고	
		기본(안)	민감도분석(안)		
제도변수	기초연금		월 30만원(물가연동)	2025년 이후 월 40만원(물가연동)	대상자: 현행과 동일(노인의 70%)
	국민연금	A값	268만원	좌동	2022년 기준 A값(3년 평균소득월액)
		가입시점 (수급시점)	40년 가입: 1990년(2030) 25년 가입: 2005년(2030)	1999년(전국민), 2033년	현재부터 신규가입하는 자 분석
		수급기간 (기대여명)	23년	→24년→25년→26년	2020년 65세 기대여명: 21.5세 (5년 마다 1세 증가)
	퇴직연금	투자수익률30%(DC형)	투자수익률 4.0%→5.0%→6.0%	대상자: 상용근로자	
경제변수	임금상승률		3.0%	-	제4차 국민연금재정추계의 가정을 준용
	물가상승률		2.0%	1.5%→1.0%→동결	
	투자수익률, 할인율		3.0%	→4.0%→5.0%→6.0%→7.0%	

소득대체율

-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을 활용할 경우 상당한 수준의 소득대체율 달성 가능
 - 중위소득자가 국민연금, 퇴직연금에 40년(25년) 가입 시 80%(50%) 수준의 소득대체율 달성 가능
 - 저소득층의 경우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소득대체율에 상당한 기여
 - 실제 가입기간(약 25년)을 고려할 경우 추가적인 사적연금 준비 필요

40년 가입 시 기초, 국민, 퇴직연금을 통한 소득대체율

(단위 : %)

		소득수준에 따른 소득대체율				
		100만원	200만원	268만원	450만원	550만원
수급개시 (가입시점)	유형					
2030년 (1990년)	기초연금	30.8	15.4	11.5	-	-
	국민연금	98.7	62.7	53.6	42.8	39.9
	퇴직연금	14.4	14.4	14.4	14.4	14.4
	합	143.9	92.6	79.5	57.2	54.3

25년 가입 시 기초, 국민, 퇴직연금을 통한 소득대체율

(단위 : %)

		소득수준에 따른 소득대체율				
		100만원	200만원	268만원	450만원	550만원
수급개시 (가입시점)	연금유형					
2030년 (2005년)	기초연금	30.8	15.4	11.5	-	-
	국민연금	53.6	34.1	29.1	23.2	21.7
	퇴직연금	9.0	9.0	9.0	9.0	9.0
	합	93.4	58.5	49.6	32.3	30.7

사적연금의 역할

- 사적연금 역할 확대를 통해 **공적연금 부족분을 사적연금으로 보완**
 - 25년 가입 시 퇴직연금과 사적연금 적립율 15%, 수익률 4% 수준이 된다면 소득대체율 59.1% 달성 가능
 - 40년 가입 시에는 중위소득자의 현재 제도 하에서도 60%이상 소득대체율 달성 가능
 - **더 많이, 더 오래, 더 잘 운용**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임

25년 가입 시 사적연금 적립요율과 운용수익에 따른 소득대체율

(단위 : %)

운용수익률	적립요율(퇴직연금+사적연금)			
	8.3%	10%	12%	15%
3%	9	10.9	13	16.3
4%	10.3	12.4	14.8	18.5
5%	11.7	14.1	16.9	21.1
6%	13.4	16.1	19.4	24.2
7%	15.4	18.5	22.2	27.8
기초+국민	40.6	40.6	40.6	40.6

주 : 평균 소득자기준 소득대체율

공·사적 연금 가입기간에 따른 필요 적립요율과 소득대체율

(단위 : %)

구분		스웨덴	대한민국
가입기간		40년	25년
공적연금	적립율	16	9 (혹은 이상)
	소득대체율	39	25
사적연금	적립율	2.5(PP)+2(퇴직)	8.3 (퇴직)+6.7(개인)
	소득대체율	22	18.5
총 소득대체율		61	59.1

주 : 1. 평균 소득자기준 소득대체율

2. 공적연금은 스웨덴은 소득연금, 대한민국은 기초연금+국민연금

3. 사적연금의 연평균 수익률은 스웨덴 5%, 대한민국 4% 가정



IV

사적연금 평가와 과제

사적연금 현황과 평가

- 사적연금 가입자 수 및 기금 규모가 상당하나 유지, 운용 등의 한계로 노후소득보장 역할 한계
 - 퇴직/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의 적립금 규모는 670조원(퇴직 300조, 개인 370조) 규모로 상당함
 - 그러나, 낮은 가입/유지율과 투자인식, 그리고 정책적 지원 취약으로 활성화 미흡
 - 이로 인해 상당한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노후소득보장 제도로 자리 매김 하고 있지 못한 실정임

사적연금 가입 및 적립액 현황 (2021년)

구분	가입대상자 (만명)	가입자 (만명, %)	적립액 (조원)
퇴직연금	1,196 (근속 1년)	684 (53.3%)	296
개인연금	적격 (연금저축, *IRP포함)	218 (10.9%) 286* (<14.4%*>)	160
	비적격 (연금보험)	628 (31.4%)	209
	소계	-	370

사적연금 현황 및 평가

가입 · 유지	낮은 가입률과 유지율 * 가입률: 퇴직 53%, 적격 11.2% (중도인출, 이직 시 해지)
자산운용	투자인식 취약 * 안전자산 투자 : 85%, 투자수익률 2% 내외
급여수급	일시금 위주 수령 * 퇴직연금 수급률 4.3%
정책 지원	연금세제지원 취약, 회계제도/지급여력 변화 등 *세액공제 전환 후 가입 약화
산업의 노력	연금상품 다양화 및 수수료 체계의 한계

주 : 1. 연금보험의 가입자는 보유건계약수로 가정
 자료: 1.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2022. 4. 17), 2021년도 퇴직연금 적립 및 운용현황 통계
 2. 국세통계연보
 3.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사적연금 현황과 평가 : 가입 및 유지 단계

- 연금계좌(연금저축+IRP) 가입율은 14% 수준으로 향후 **미가입자의 가입유인 확대 필요**
 - 소득수준별로 가입율은 1~62%, 가입자의 납입액은 75~417만 원으로 연소득의 5% 내외를 적립중
 - 연 소득 2,000~6,000만 원 근로자의 가입율 50%, 소득 대비 납입율 7% 달성 시 연간 약 9조 원 추가 적립 가능
- 퇴직연금(연금계좌 포함) 가입자의 **이직 후 해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IRP로 이전된 퇴직연금은 중도인출, 이직 시 해지로 연평균 10조 원 이상이 인출됨

연금계좌(연금저축+IRP) 가입율, 납입액 추이

연소득(만원)	가입율	납입액(만원)	적립율
전체	14%	309	-
2,000 이하	1.5%	75	-
2,000~4,000	12%	209	7.0%
4,000~6,000	33%	285	5.7%
6,000~8,000	50%	356	5.1%
8,000~10,000	62%	417	4.6%

주 : 1. 가입률은 과세대상근로자(총급여자) 대비 납부자 수의 비율로 소수점 한자리에서 반올림
 2. 적립율은 (납입액)/(연소득의 중간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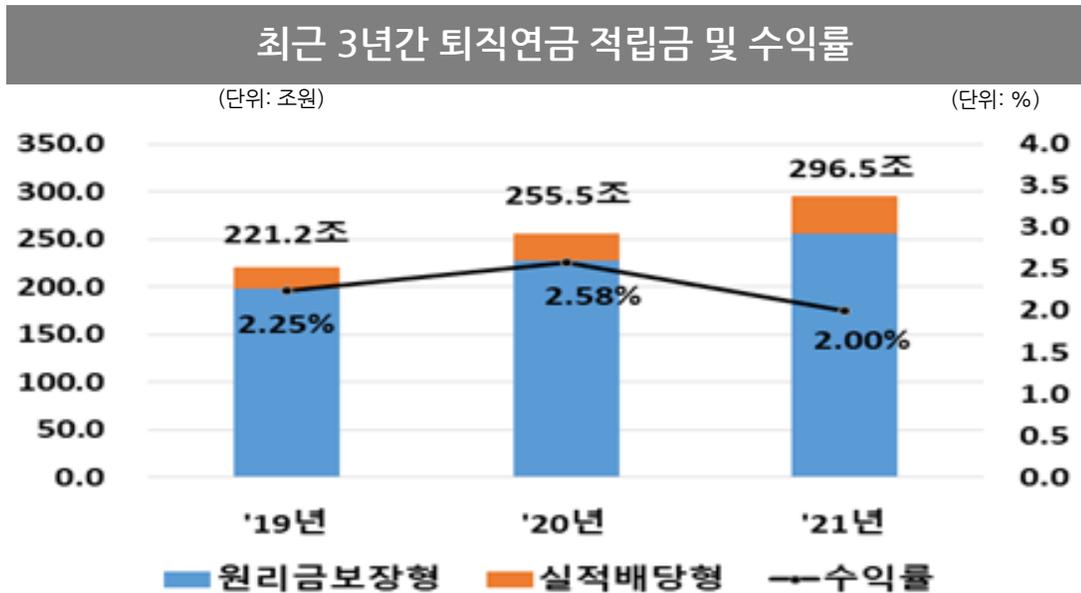
퇴직연금 IRP 이전 및 해지 금액 추이

연도	이전금액(조원)	해지금액(조원)	해지율(%)
2015	10.7	9.5	88.8
2017	11.5	10.1	87.9
2019	13.9	11.2	80.9
2021	17.6	11.7	66.3
2015~2021	13.1	10.7	81.5

주 : 가입률은 과세대상근로자(총급여자) 대비 납부자 수의 비율
 보험료율은 1인당 총급여액 대비 납부액의 비율
 자료 : 통계청 퇴직연금 통계결과 각 연도 재구성

사적연금의 평가 : 자산운용 및 수급 단계

- **안전자산 선호**로 수익이 낮고, **금융시장 환경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음
 - 투자자 교육 등을 통한 가입자의 적정 포트폴리오 구성 유도 및 디폴트 옵션 활용
- 우리나라 퇴직연금은 대부분 **일시금으로 수령**되고 있음('21년 연금수령 비율 4.3%)
 - 적립금이 적을 수록 일시금을 수령하므로 적립금 누수를 막을 수 있는 방안 필요



자료: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2022. 4. 17), 2021년도 퇴직연금 적립 및 운용현황 통계

퇴직연금의 수급형태별 수급 현황(2021년)

(단위: 좌, 억 원, %)

내용	연금수령	일시금수령	전체
계좌 수(A)	16,984 (4.3)	380,286 (95.7)	397,270 (100.0)
금액(B)	32,028 (34.3)	61,398 (65.7)	93,426 (100.0)
계좌당 금액(B/A)	1.89	0.16	0.24

자료: 금융감독원(2022), 2021년도 퇴직연금 적립 및 운용현황 통계

사적연금의 평가 : 정책지원 및 산업의 노력

- 연금세제 개선 등을 통한 저소득층 **사적연금 가입유인 제고**와 연금화 강화 필요
 - 소득공제 방식으로 환원 혹은 저소득층 세액공제율 상향
 - 독일 리스터연금 및 호주, 영국 등의 **보조금 제도**를 참고하여 저소득층의 사적연금 가입유인 제고
- **고객의 편익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연금상품개발** 및 수수료 체계 합리화
 - 고연령거치연금(예, 톤틴연금) 등 다양한 연금상품 개발, 보험과 연금에 대한 균형적 수수료 관리 필요

연금세제 등 연금정책 개선	
구분	개선사항
연금세제	- 소득공제 방식 환원 혹은 저소득층 세액공제율 상향 - 주요국의 세제 및 보조금 제도 참고(리스터연금 등) * 영세사업장 보험료 지원 통한 가입유인 제고
기타 연금정책	- 퇴직연금 일원화 (퇴직금제 폐지) - 종신연금 혹은 그에 준하는 연금화 수령 원칙(일시금 폐지) - 공사적연금 역할 분담 목표 설정: 국민 30~40% 퇴직/개인연금 30~20%!

연금산업의 노력	
구분	개선사항
상품개발	- 미국 고연령거치연금 등 톤틴형 연금 등 다양한 연금상품 개발 - 보험과 요양서비스 그리고 연금을 연계한 상품 개발
수수료	선/후취형 수수료에 대한 재검토 보험과 연금상품에 대한 균형된 수수료 체계 구축

소결 :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

- 가입에서 수급단계까지 적립금 관리와 연금수령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 지원과 산업의 노력 필요

사적연금 현황/평가에 따른 개선방향

	현황/평가	개선방향 (정책지원 등)
가입 · 유지	낮은 가입률과 유지율 * 가입률: 퇴직 53%, 연금계좌14% (중도인출, 이직 시 해지)	퇴직연금 일원화, 자동가입, 이직 시 해지 불가
자산운용	투자인식 취약 * 안전자산 투자: 85%, 투자수익률 2% 내외	자산운용시스템 효율화, 투자교육 강화
급여수급	일시금 위주 수령 * 퇴직연금 연금화 수급률 4.3%	종신연금화, 자동연금수급 등 연금화 강화
정책 지원	연금세제지원 취약, 회계제도/지급여력 변화 등 *세액공제 전환 후 가입 약화	연금세제 및 보조금 지원(종신연금 선택 시), 회계제도/지급여력제도의 효율적 운영에 대한 주기적 검토
산업의 노력	연금상품 다양화 및 수수료 체계 한계	다양한 연금상품 공급, 수수료 부담 합리화 등



결론 및 제언

결론 및 제언

- **공적연금 개혁과 사적연금 활성화를 통해 소득보장 및 공적연금 지속가능성 강화**
 - 중장기적으로는 ‘기여한 만큼 받는’ 개혁으로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제고
 - 자산 및 소득을 고려한 기초(노령)연금을 제공하여 취약계층의 노후소득 보장
 - 퇴직연금 의무가입(혹은 자동가입)을 통해 퇴직연금 사각지대 해소

- **사적연금을 “더 많이, 더 오래, 더 잘 운용” 하기 위한 정부와 산업의 노력 필요**
 - 현재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유지될 경우 퇴직연금과 사적연금의 적립율 15% 이상, 운용수익율 4% 이상 필요
 - 퇴직연금 중도인출/이직 시 해지 조건 강화 필요 (예: 주택자금 관련 중도인출 금지, 이직 시 적립금 인출금지)
 - 퇴직연금 수령 시 종신연금에 상응하는 연금화 수령 의무화
 - 저소득층에 대한 사적연금 납입 시 보조금지급(예: 독일, 영국 등), 세액공제(예: 호주, 미국) 등을 고려
 - 가입자에 대한 알기 쉬운 상품 정보제공을 통한 금융회사 간 경쟁 유도 필요
 - 가입자 편익증대를 위한 다양한 상품개발과 수수료 합리화

감사합니다.